

특별
증면호

6호 2008년 9월 29일

www.resistcandle.com

반전 | 반신자유주의 | 노동자 투쟁

저항의 촛불

The Candlelight Resistance

‘다함께’(www.alltogether.or.kr)의 주간신문 <저항의 촛불>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값 800원**



이명박이 얻는 종부세 감면 혜택 2327만원

부자 세금은 깎고

노동자 임금은 동결?



특집 - 세계경제 위기 Q&A
경제 위기는 왜 발생했고
대안은 무엇인가?
4~6면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의 경제 위기 대책
3면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8~9면



촛불수배자 김광일 씨
어머니 인터뷰
16면

지난 번 세계경제 위기 때
어떻게 싸웠는가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12면



아소 다로와 일본 정치의 위기
11면

《촌놈들의 제국주의》 서평
14면

‘성매매와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0면

www.resistcandle.com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저항의 촛불》 온라인 기사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신자유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파산했
고, 그것이 만든 공간을 이용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됩니까?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이명박의 경이적인 낙관론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신자유주의)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

— 정신 못차린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리먼 같은 세계
적인 은행이 한국의 KDB(산업은행)한테
주식 인수를 검토해달라고 할 정도로
KDB가 그래도 대단한 대구나 하고 위상
을 높인 면도 있다.”

—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 대한 청와대 경제수석
박병원의 허풍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이명박 대
통령의 말 가운데 제일 듣기 거북하고 민
망스러운 것 중 하나다. … 한마디로 경
제 잘된 것 하나도 찾기 어렵다.”

— 〈조선일보〉김대중

“고마움을 모르면서 거짓말엔 찰도 속는
인간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전교조 교
사들이 많은 학교에 보내면 된다.”

— 극우의 조갑제

“747 공약 실현이 눈앞입니다! 7퍼센트
대 물가 상승률, 4백 포인트 주가 하락,
7퍼센트 대 지지율!”

— 한 네티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범래 : “시위에 아
이들을 데리고 나온 데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여창수 : “면밀히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
겠다.”

— 잘들 논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격하고 부당하다. 한
명이라도 부당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헌법정신”

— 역시 강부자의 ‘강’만수답다

장호중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
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
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메릴
린치에 투자한 1천만 달러도
5분의 1이 날아갔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수조 원을 날렸다.

이 돈이면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8만
5천 원을 34만 원으로 올리고
도 남는다.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삭감한 자들이 반년 만에 4년치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액수
를 날려먹은 것이다.

7조 원 손실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주식은 저평가돼 있을
때 사야 한다’며 파산한 은행들
과 미국 부동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노무현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있던 지 1년도 안
돼 이번에는 주식투자로 기금을
날렸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를 기업주
들과 부자들의 자산 증식·보전
에 쏟아붓는 미친 투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 운
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금
운용위원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
의 기금 운용을 비판하면서도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

자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국채 등 안정성이 확실한 투자
처”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금 ‘안정성이 확실
한 투자처’는 찾기 힘들다. 최근
의 잇단 조치로 미국의 재정 적
자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위기가
더 심화하면 미국 국채뿐 아니
라 달러화 가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보신당의 이런 모순된 태도
는 현재 수백조 원의 기금을 쌓
아 두는 한국의 적립식 연금 제
도를 고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
일 것이다. 어차피 기금을 쌓아

둬야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 투
자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매년 필요한 연금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당초 기금 적
립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업주들에게나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늘어나는
보험료는 정부와 기업주, 그리
고 부자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연금을
나아지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9월 23일 국민연금 금융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한 민주노총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장호중

지난 9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자이툰 부대 교체 병력을 이라크
에 보냈다. 덕분에 새로 파병된
2백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앞으
로 최소한 세 달 동안 미국의 부당
한 이라크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
는 일을 하게 됐고,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또 이라크 사

막 위에 뿌려지게 됐다.

물론 연말에 철군하겠다는 얘기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미
국의 파병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철수하겠다는 얘기는 언제든 계획
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해에
도 파병연장안 국회 처리 시한을
넘겨 파병을 연장한 전력이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쫓고 있는

근본 문제 — 대다수의 이라크인이
미군을 증오하고 폭두각시 이
라크 정부는 스스로 이라크를 안
정시킬 능력이 없다는 — 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세
력과 미군 사이의 충돌은 언제든
다시 격화할 수 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계획

한국의 기업주들은 한국 정부
가 미국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전
쟁터에서 활약하는 것이 한국 기

업의 세계 진출에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할 뿐 이라크인들과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의 생명과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설령 이라크 석유채굴
권 등 떡고물이 떨어진다 해도 미
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기업
주들뿐일 것이다.

이 더러운 전쟁에 동참하는 범
죄 행위를 연말까지 계속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자이툰 부대
는 당장 철군해야 한다.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장호중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기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이 법이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되
지도 않은 마당에 한국이 먼저
규제 목표를 정할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세계 10위권에 들고
2007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중국과 함께 세계 1위를 기록
했다.

게다가 기업주들의 호들갑과
달리 이명박의 계획에는 핵발전
확대와 기업 규제 완화, 감세, 민
영화 등 친기업 정책들과 각종
요금 인상 등 반서민 정책들이 핵심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기후변화를 막기는커녕 기후변
화를 가속하고 대응 능력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할당

한다지만 유럽의 주요 정부들이
그런 것처럼 현재의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해서 온
실 가스 배출량은 전혀 줄지 않
을 것이다. 핵 산업으로 투자된
어마어마한 지원금은 친환경 재
생 에너지 연구와 보급을 줄이
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물론 에너지 위기와 기후 재
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
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주도 뭘
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길 것
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 육성”, “원
자력 산업 성장”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기회로
삼는 데 더 관심이 있고, 기업주
들은 이조차 위험한 도박으로
여기는 듯하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구
조조정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경
제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윤을 줄
어둘게 할까 봐 걱정인 것이다.

기업주들의 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기껏해

야 보상이란 인류를 구하는 것
뿐이니 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스스로는 도저히 이윤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을 강력
하게 통제해야 한다. 시장이 아
니라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에너지 요금 인
상이 아니라 건축 단열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안락하며
값싼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보
급해야 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따
라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강력
한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강동훈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투자는행으로 만들고, 금산분리 완화로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헤지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하수도로 빨려들어 가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장하준)이다.

이 속에서 몇몇 재벌과 부유층은 새로운 돈벌이와 투기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뿐 아니라 위기의 강도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올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기업 민영화 등이 제대로 실행될지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산업은행 지분을 해외 투자 은행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HSBC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무너진 신자유주의의 신기루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들이 무식해서만은 아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특정 정책이나 모델만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기루

한국 지배자들은 진작부터 미국처럼 금융과 서비스 부문을 키워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로로 삼으려 해 왔는데, 그 모델이 눈앞에서 파산해 버린 것이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제조업에서 수익성 악화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서민을 더욱 쥐어짜 수익성을 만회하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 물론 이들도 전 세계 다른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대안에 대해 자신감을 크게 잃었겠지만 말이다. 종부세,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청와대·한나라당 내부의 균열은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와 지배자들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지배자들은 노동자·서민에게 물가 폭등과 임금 억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을 받아들여 ‘경제를 안정’시키자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불가항력적 고통의 터널, 참고 통과해야” 한다며 ‘고통분담론’을 떠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 사기업들도 임금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노동자·서민을 희생시켜 재벌·강부자의 이윤을 늘려준다고 위기가

‘강부자’들이 감면받는 종합부동산세 액수



해결될지도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한 ‘경제 안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안정’이란 말인가.

노동자·서민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절망적이다. 예를 들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물가와 환율은 치솟아 3종의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물·박스 수집에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주부·대학생 등 20~30대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버렸을 고물을 가져와 2천~3천 원씩 받아가” 고물 수집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청와대 안에

7백47평짜리 공원을 만들어 ‘747 공원’이라고 부르려 한다.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1퍼센트 부자들의 재산만 늘리려는 이런 엉터리들의 ‘고통 분담’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중투쟁

규제 완화, 부유층 세금 감면, 부동산 투기 유발이 아니라 부유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가 노동자·서민의 일자리와 임금, 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과 고통 전가를 막고 우리의 임금·일자리·삶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더 강력한

파업·시위·대중투쟁이다.(7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참고하십시오.)

최근 다음 아고라에서는 “악탈적 자본주의, 불로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비판하며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에 더욱 가까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회혁명 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조회수가 7천 건을 넘었고 6백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큰 타격을 받은 지금 이에 맞선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무현과 민주당의 뻔뻔스런 말바꾸기

최근 노무현은 자기가 만든 웹사이트에서 “신자유주의가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명박의 금융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금융산업 선진화’는 노무현이 추진하던 ‘동북아 금융허브’를 이름만 바꾼 것이고, 자본시장통합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과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종합판인 한미FTA도 적극 추진했고,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켜 기륭전자 등의 비극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구역질나고 경악스러운 말 바꾸기에 속아서 이들과 힘을 합쳐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다.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은 2천3백27만 원, 강만수도 1천3백39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됐고, 국회의원 2백99명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6백90여만 원에 이른다.

강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부족해진 세수는 서민들의 재산세를 늘려 메우겠다고 한다.

강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줘 이들이 더 여러 채의 집을 사고팔면서 투기를 하도록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일으켜 부도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을 호전시키려는 것이다.

6백조 원에 이른다는 가계 부채 중 60퍼센트 이상은 부동산담보대출로 추정되고 있고, 건설사들이 저축은행 등의 투자를 받은 40조~50조 원의 연체율이 15퍼센트에 이르러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며 이런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된 아파트 4채 중 1채가 미분양이고 수도권 미분양률은 17.5퍼센트에 이르는데, 집을 더 지어 무주택자를 없앤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새로 개발된 은평뉴타운에서 원주민 정착률은 20퍼센트에 그쳤다는 사실도 이를 보여 준다.

이명박의 이런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쏟아지는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올 것이다. 거품을 키워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꿈수는 재앙적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

경제 위기를 해부한다 - Q&A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싫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독성’ 부채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토로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을 석유가 폭등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종결지었던 1973년 불황과 비교한다.

다른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929년 월스트리트 공황을 떠올린다. 당시 세계 무역 체제가 붕괴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이어졌다. 대공황은 끔찍한 세계대전을 통해서야 종식될 수 있었다.

일부 사람은 위기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현재 위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대규모 국가 개입 덕분에 1930년대식 파국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미 1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은 공공부채 규모를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이런 재정 적자가 높은 이자율·낮은 투자율과 결합돼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를 낳을 수 있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번 위기는 논쟁을 촉발시켰고 이 논쟁은 단지 회사 중역 회의실이나 정부 재정 위원회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과연 위기가 끝났는가? 위기는 일부 막 나간 은행기들 때문에 발생했는가? 세계경제의 근본은 과연 튼튼한가?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위기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자체의 실패 같은?

우리 지배자들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글들이 보여 주듯이 그것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다. [출처 :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위커> 2120호]

금융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위기는 1년 전 미국에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붕괴해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시장은 대부업체들이 모기지를 팔 새로운 대상을 필수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성장했다.

대부업체들은 신용 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고 이자의 이자로 돈을 빌려 줬다. 그렇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자 서브프라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악성 부채는 단지 모기지를 발행한 대부업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기지 부채를 거래하는 ‘제2시장’이 형성되면서 악성 부채는 금융 제도 전반으로 확산됐다.

모기지 부채는 채권으로 재포장돼 다양한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사고팔렸다. 증권업자와 은행들은 이런 채권들의 가치를 놓고 투기를 벌였다.

지난해에 사람들이 모기지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하자 이 채권들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었음이 밝혀 드러났다.

그러나 모기지 부채가 재포장되고 팔린 방식 때문에 악성 부채가 정확히 어디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은행들은 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 두려워 은행 간 상호 대출을 중단했다. 은행들 사이의 활발한 신용 교환이 중단되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일상의 영업 활동에서 단기 대출의 형태로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 준다. 그런데 은행 간 대출이 중단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기 활동이 이번 위기에 연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투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투자자와 중개인들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다른 이들도 뒤를 따랐다.

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투기꾼들의 책임인가?

구역질나게도 은행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용해 어떤 이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이것은 공매(空賣) 덕분이었다. 비밀 금융 집단인 헤지펀드를 위해 일하는 증권업자들은 주식들을 빌린 후 주가 하락을 기대하며 주식들을 일제히 판다. 나중에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으면 주식을 상환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심지어 도박판과 다를 바 없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행위는 문제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부는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칼 맑스가 지적했듯이 금융 제도는 “위기와 속임수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예컨대,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미래에 무언가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미리 알아 주식을 사고팔 타이밍을 미리 안다면 때돈을 벌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1백72건의 합병을 조사한 한 연구를 보면, 모든 경우에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일부 못된 증권업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전체 금융 제도의 혼란스러운 성격을 봐야 한다.

최근 HBOS 은행(영국 최대 모기지 은행)은 공매가 아니

리먼브러더스 회장 딕 폴드의 초상화에 사람들이 낙서를 했다
‘탐욕’이란 단어가 눈에 띈다

라 대규모 부채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 HBOS가 파산 위기에 처한 날 거래된 주식 중 3퍼센트만이 공매 활동에 연관됐다.

금융시장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금융시장이란 대규모 카지노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핵심 요소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복수 기업에 바탕을 둔 체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쟁 기업보다 앞서 나가려고 이윤의 상당 부분을 시설 투자에 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이윤을 곧바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투자하고 싶어도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그들은 은행 시스템, 주식 거래, 또는 유사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투자를 위한 수단을 찾기도 한다.

금융시장은 자본가들이 또 [당장 투자할 생각은 없는]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 자본가가 나중에 투자할 생각으로 은행에 돈을 입금했다고 치자. 은행은 그 돈을 당장 투자하길 원하는 다른 자본가에게 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또한 불안정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윤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황 상태가 급속히 확산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산은 나름의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기도 한다. 이 엄청난 카지노는 뉴욕 월스트리트, 런던 금융가를 만들어 냈고 이곳에서 부자들은 증권과 외국환 등 각

종 투자처에 돈을 쏟아 붓는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는 시장이란 카지노에서 판을 벌일 수 있는 각종 방식들을 만들어 왔다. 예컨대 선물 계약은 미래의 상품 가격을 두고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선물은 파생 금융 상품 중 가장 간단한 예인데, 이것의 가치는 다른 더 간단한 상품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런 파생 상품들은 투자자들이 증권과 채권을 사지 않고도 그 가격에 따라 복잡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모든 파생 상품의 이론상 가치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5백96조 달러다.

금융시장의 확대는 금융 시스템의 국제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나쁜 상황에 빠지면, 완전한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 예가 지난해 모기지 대출 붕괴가 불러온 효과다.

대부업체들은 부채를 보유하고 이자만 챙기기보다 그것들을 묶어서 채권으로 만들어 팔았다. 이 채권의 가격을 놓고 또 다시 도박판이 벌어졌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 채권들의 가상의 가치를 보증해 줬다. 이것이 CDS[신용도파괴스왑 — 부도에 대비한 보험]다.

최근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때문에 보험사들은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장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런 보험은 기관들 사이에서 사적으로만 거래됐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빚을 졌는지, 또 그것을 갚을 수 있는지도조차 알 수 없다.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구할 수 있을까?

미국 정부는 악성 부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시장이 다시 추락할 때 미국 정부가 비슷한 규모로 개입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 것이다.

올해 초 대형 보험회사를 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개입은 성공으로 평가됐다. 3월 베어스턴스 구제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고, 얼마 전 초대형 모기지 기업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사실상 국유화했을 때도 그랬다.

미국, 영국과 다른 주요 국가의 정부들은 은행들이 갇싸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엄청난 공공자금을 금융체제에 퍼부었다.

그러나 이것이 낳을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유류 중인 부채의 규모는 전 세계 총생산보다도 크다.

정부들의 공적 자금 투입이 단기적으로 주가만 부양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주식시장에 공짜 돈을 퍼붓는 꼴이 될 것이고 만약 위기가 계속된다면 대부분 회사 불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시장이 붕괴된 후 1930년대 미국 정부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불황이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 정부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 돈을 무한정 쓸 수는 없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최대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나머지 경제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채상환 부담을 졌고 10년 동안 경기 후퇴와 정체가 계속됐다.

공룡같은 미국 경제가 당장 붕괴를 모면하는 대신 완만한 장기적 위기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 유혹이 더 커질 수 있다.

왜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을 겪는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겪어 온 위기의 가장 최신 버전일 따름이다. 세계경제는 1973년, 1990~93년, 1998년, 2001~2002년 등 지난 35년 동안에만 수차례 불황을 겪었다.

이윤율은 197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매번 불황이 끝날 때마다 자유시장의 전도사들은 체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번 불황이 찾아오면 금방 당황했다.

이런 호황과 불황의 순환은 자본주의의 경쟁적이고 무정부적인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중앙집중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회사들은 각자 시장에서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 한다.

그래서 필요보다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팔리지 않은 상품이 쌓이면서 이윤이 타격을 입어 기업들은 궁지에 몰리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경제 위기가 더 심화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불황에 빠진다.

일부 회사들이 도산하고 경쟁 회사들이 이들의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면 체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인 이윤율 하락 경향이 있다.

칼 맑스는 1백 년 전에 이 경향을 지적했다. 이것은 실제 이윤율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이윤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수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노동자의 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는 그가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6면으로 이어짐



》5면에서 이어짐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이 창조한 가치 중 일부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잉여 가치가 이윤 창조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경쟁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신에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가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 덕분에 더 적은 수의 노동자를 가지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자본가는 노동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이 일하게 해 노동착취율을 높이려 한다.

단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이점은 사라진다. 자본가는 이제 이윤을 높일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에 자본가는 돈을 벌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 자본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투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경제가 잠시 호황을 누릴 수도 있지만 오직 근본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잠시 막을 뿐이다.

위기가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것인가?

전체 경제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실물' 경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분열에 기초해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보통 노동자가 창조하는 가치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준다.

칼 맑스는 오늘날의 금융시장을 의제[가공] 자본이라고 불렀다. 금융시장의 활동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거나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 금융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창조한 이윤을 놓고 도박이 벌어질 뿐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의 건강에 의존한다.

주가의 가치가 아무리 부풀려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배당금의 가치 — 이것은 창출된 이윤에 기초한다 — 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윤이 떨어지면 그 회사는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주가도 떨어진다.

물론 한동안 시장은 실제 이윤율이 보장하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투기적 거품이며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실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컨대, 연금기금은 헤지펀드의 주요 고객 중 하나다. 헤지펀드는 보통 사람들의 연금을 가지고 도박을 벌인다.

금융 부문에서 위기가 심화하면 실질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이 고갈되면 은행가들만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도 파산한다. 단지 은행가들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이 반복될 거라고 예측한다. 당시와 오늘날 상황에는 공통점 — 위기 발생에서 투기와 신용이 한 구실이 특히 그렇다 — 이 있다.

그러나 사실 1930년대식 대공황이 발생할지 그보다는 완전한 장기 불황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할 것이다. 1930년대에도 그랬다. 대량해고로 실업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금융 부문이 위기에 빠지면서 은행은 개인과 기업에게 신용을 빌려 주기를 꺼리고 있다. 이것은 몇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값싼 신용 덕분에 성장해 왔다. 임금 인상은 억제됐지만 이런 신용 덕분에 사람들은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신용을 얻기가 힘들어지고 생계비도 오르고 임금 인상이 억제되고 실업 위험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주머니를 꼭꼭 닫을 것이다. 이것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금융시장에 돈을 퍼부어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 한다. 그들은 또한 경제에 심각한 파급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들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다.

동시에 실업의 증가로 세수는 줄어든 것이다. 주류 정당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정부 지출을 줄이려 할 것이고, 공공서비스와 연금 지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나?

불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지금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다. 그러나 정부들은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조치들을 도입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통받더라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에너지 가격을 또 올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이런 이윤에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물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제한을 뒤야 한다. 에너지 회사들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가 국가재정을 확보해 불황이 미칠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부자와 기업들의 이윤에 세금을 매기면 많은 돈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공공주택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그 돈을 실업 수당이나 연금 지급을 늘리는



1936년 프랑스 총파업 - 경제 위기 때 저항해 승리한 사례

미국 디트로이트, 주택 압류에 반대하는 주민 행동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데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물가 인상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낼 뿐이다.

1930년대처럼 온갖 공격에 맞서 기층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즉, 주택 압류에 맞서 집단적으로 싸우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작업장 폐쇄에 맞서 작업장을 점거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협상 결과에 도전해야 한다.

불황은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광기가 뚜렷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위기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넘기려 할 것이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와 실업자 들을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자본가와 국가 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단결해서 불황이 가져올 재앙과 사회를 우경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개혁만으로 충분한가?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본래적 특성이다. 불황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정적 체제를 노동자 통제에 기초한 민주적 계획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건설해야 한다.

경제 위기 같은 끔찍한 시기에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위한 체제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고 살고 있는 세상의 지배적 사상은 자본주의가 사회를 조직할 유일한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들이 반격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노동계급은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노동자들은 과거에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일들 — 파업을 조직하고, 대중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혹은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등 — 을 자신이 하고 있음을 돌연 깨닫는다.

개혁을 위한 투쟁과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철옹성을 깨부술 수 있다.

혁명가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개혁을 위해 싸운다. 먼저 혁명가들은 진정으로 개혁을 바란다. 우리는 진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막고 싶고, 인종차별주의에 도전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싶다. 이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을 위한 싸움은 사람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며 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본주의 체제에 의문을 던질 기회를 제공한다.

자본주의가 보통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급진화하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를 이해하게 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의 복원을 마저 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협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공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파세하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고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어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종파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안락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충남대 맑스주의 포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도래할 것인가
연사_ 이수현
9월 30일(화) 오후 6시
충남대 인문대 104호
문의 010-5733-0715



지역사회포럼

북부 지역사회포럼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도
연합해야 할까?
10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10-5544-4285

남부 지역사회포럼
위기의 신자유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_ 김어진
10월 1일(수) 오후 8시
서울교대 학생회관 2층 토틀마루
문의 010-8181-4800
참가비 2천 원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는가?

일시 : 10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연사 : 장시복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장소 : 추후 공지
주최 : 다함께
참가비 : 2,000원
문의 : 02-2271-2395

장시복 교수의 새 책 —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책세상)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전선 — 그루지야

[편집자]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치인들은 서로 호전적 말을 쏟아냈다.

영국 사회주의자이자 동유럽 전문가인 데이브 크라우치는

이 사건 뒤에 내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 간 갈등이라는 근본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달 카프카스에서 벌어진 전쟁을 다룬 영국 언론의 보도는 거의 천편일률적이었다. 작고 약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웃 강대국 러시아의 횡포에 시달린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시장과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은폐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다.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이끄는 그루지야 정부는 조지 부시의 가장 긴밀한 전쟁 동맹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아욕을 전폭 지지해 왔다. 모스크바 주재〈뉴욕 타임스〉수석 특파원은 미국과 그루지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미국은 … 취약한 그루지야 국가의 군비 증강을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집권한 사카슈빌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임무들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사카슈빌리의 출세는 “이라크 전쟁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에게 정치적 지지와 외국 병력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점과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 사카슈빌리가 그루지야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겠다고 제안하자 미국 국방부는 그 보답으로 그루지야 군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혁신시켜 줬다. 고위급 수준에서는 그루지야 군사교범을 혁신하고 지휘관·참모장교 등의 훈련을 지원했고, [말단] 분대 수준에서는 미국 해병대와 병사들이 그루지야 병사들에게 전투의 기본 원칙들을 훈련시켰다.”

권위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그루지야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군대다. 사카슈빌리를 권좌에 앉힌 2003년의 ‘장미 혁명’ 이래로 그루지야의 국방비 지출은 4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그루지야는 이라크에 2천

명을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수백 명을 더 파병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루지야 국내에서 사카슈빌리의 자유 시장 ‘개혁’은 빈민들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지난해 11월 부패와 부정·비리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들은 군경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전쟁 직전에는 그루지야에서 미군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7월 15~31일 실시된 ‘신속 대응 2008’ 작전에 미군 1천 명과 그루지야군 6백여 명이 참가했다. 그런 연례 전쟁 연습은 그루지야 사상 처음이었다. 전에는 보통 폴란드나 불가리아에서 그런 훈련이 실시됐다.

그 훈련이 끝난 지 하루 뒤인 8월 1일 그루지야 군대와 그루지야에서 분리 독립한 남오세티아 군대가 충돌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일어난 최악의 폭력 사태였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미국 외교관들의 주장이 웃기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그 지역에 총기와 병력을 쏟아붓고 전쟁 기술을 전해 줬다.

1주일 뒤인 8월 7일 밤에 그루지야군은 남오세티아의 수도인 조지발라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면서 폭력 사태를 격화시켰고, 이틀날에는 그루지야 지상군이 남오세티

아로 진격했다.

오세티아의 인권 활동가인 라리사 소티예바는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소식통들의 목격담으로 유명한 ‘전쟁과 평화 조사 연구소’(Institute of War and Peace Reporting)에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루지야는 [조지발라] 시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루지야 공군의 지원을 받은 온갖 중화기 공격이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진 끔찍한 하룻밤이 지나자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흔히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편드는 오류를 범하는 미국의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8월 13일 조지발라에 들어갔다. 그 단체의 연구원들이 보고한 목격담은 다음과 같다. “포격으로 수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파괴됐다. 또, 그루지야는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를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라드 로켓포(우박)라는 뜻의 다연발 로켓포)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라드 로켓포는 군사 시설만을 겨냥해서 공격할 수 없다. 따라서 그루지야군은 처음부터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몇 건물들은 근거리에서 탱크의 포격을 받은 듯하다. 민간인들이 흔히 피난처로 이용하는 지하실을 겨냥한 발포 증거도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파괴 시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대부분의 파괴는 그루지야군의 포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지발라에서만 44명이 사망하고 2백73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에서 적어도 1백3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제

그렇다면 왜 그루지야군은 이 유혈 남자한 공격을 감행했는가? 그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충돌이었다

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그리고 왜 러시아는 그루지야 본토를 폭격하고 민간 무장 조직들을 동원해서 [그루지야] 민간인들을 공격하게 하는 등 잔혹하게 대응했는가?

1991년에 옛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이 지진이 전 세계에 불어일으킨 진동은 아직까지도 느낄 수 있다. 옛 소련 권력이 사라지고 일본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미국은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 됐다.

미국은 그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주요 금융 기관들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옛 소련 블록

의 약소국들이 경제를 개방하도록 만들었고 이 새로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위를 확보해 줬다. IMF에서 대규모 차관을 대출받은 그루지야 같은 나라들은 그 대가 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 들여야 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옛 소련 블록 나라들이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 결속시키면서 과거 냉전 시절의 적 대국[러시아]을 더한층 고립시켰다. 폴란드·헝가리·체코공화국이 1999년에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4년에는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나토 회원국이 됐다.

미국은 조지 소로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후원하는 NGO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나라들의 고학력 청년 엘리트들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 나라들에 정치 위기가 닥치자, 미국이 설립했거나 선정한 단체들 — 세르비아의 오토 포트[저항이라는 뜻], 그루지야의 크마라[‘이제 그만’이라는 뜻], 우크라이나의 포라[‘떼가 뿔다’는 뜻] — 이 대규모의 그러나 대체로 수동적인 반정부 운동들을 주도해서 친미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권들은 전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탐욕스럽고

부패한 세력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입증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전히 서방의 말을 듣지 않는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은 자신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기회를 노렸다. 1991년 사담 후세인을 상대로 한 제1차 걸프전은 그런 군사 작전의 효시였다. 1999년에 나토군이 세르비아의 공장, 다리, TV 방송국 등을 폭격한 것은 주로 발칸 반도에 대한 서방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세르비아의 민간 무장 조직들에게서 코소보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뉴욕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9·11 공격으로 미국은 ‘테러’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 하에 군사적 완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용해 미국은 석유가 풍부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군사 기지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라이벌인 중국과 더 나아가 러시아도 포위할 수 있었다. 이라크 침략은 중동을 ‘민주화’하려는, 다시 말해 동유럽에서 잘 먹었던 방식을 아랍 국가들과 이란에 적용하려는 훨씬 더 광범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루지야의 최근 사건들의 핵심에는 이런 전략이 있었다. 미국과 그루지야의 군사 협력은 그루지야와 체첸의 접경 지역인 판키시 계곡에 숨어 있는 알 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됐다. 또, 그루지야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카스피해 연안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통하는 핵심 요지이기도 하다. 카스피해 연안에서 시작된 주요 송유관 두 개가 그루지야의 영토를 지나간다.

그러나 그루지야가 나토와 가까워지고 그루지야와 미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그루지야 자신의 야심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루지야에서 분리 독립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90년대 초 이래로 그루지야와 압하지야·남오세티아 사이에는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긴장이 지난 8월 전쟁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다른 주요 열강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 줬다.

러시아군이 남오세티아로 진격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그루지야의 공격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9년 전 나토의 세르비아 공격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러시아는 그루지야 민간인들을 겨냥한 잔인한 보복에 책임이 있고, 남오세티아의 러시아 친미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권들은 전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탐욕스럽고

의 지배력을 되찾으려 애를 썼다.

그런 노력의 첫 번째 대상이 북오세티아 — 러시아의 작은 공화국으로 남오세티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 었다. 1992년에 러시아는 북오세티아의 정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북오세티아 수도인 블라디카프카스의 인근 지역 — 1944년에 스탈린이 이웃 잉구셰티아에서 떼어내 북오세티아에 합병시킨 — 에 살던 잉구슈족 7만 명을 쫓아냈다. 오세티아의 우익 민간장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잉구슈족의 집에 불을 지르는 동안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그 뒤 북오세티아는 카프카스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전초 기지 구실을 했다. 북오세티아의 인구 1인당 무기 보유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1994년 12월 러시아가 체첸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러시아군은 북오세티아의 기지들에서 출격했다. 그 전쟁에서 체첸 저항세력은 사기가 떨어지고 지리멸렬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 그러나 1999년에 러시아의 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격한 직후 일어난 민족주의 물결을 이용해 체첸을 다시 침략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체첸 저항세력을 분쇄했다.

러시아가 1990년대 초의 불황에서 빠져나오고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푸틴은 러시아 군대를 재건할 수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루지야가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됐다.

지난해에 러시아는 그루지야에 대한 경제 봉쇄를 단행하고 그루지야와 교통·우편을 모두 차단했다. 또, 그루지야 이주민 수백 명을 추방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영업중인 그루지야 기업들을 괴롭혔다. 러시아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들은 그루지야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적 보도를 쏟아냈다.

여러 해 동안 그루지야는 러시아의 세력 약화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가 무력에 의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그루지야에 반항하는 남오세티아 정권은 그루지야와 크게 전투가 벌어지면 러시아가 개입해 자신들을 편들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7월에 미국과 그루지야가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때 남오세티아에서도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 8월 1일 그루지야 군과 충돌이 일어나 첫 사상자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남오세티아는 여성과 아이들 1천여 명을 대피시켰고, 북오세티아에서는 자원병 수백 명이 무기를 들고 남오세티아로 넘어 왔다. 며칠 만에 블라디카프카스에서는 조지발라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참가하겠다는 자원자 1만 명을 넘어섰다.

제국주의 열강 간 충돌의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곤 한다

그래서 권위있는 러시아 주간지 〈인디펜던트 밀리터리 리뷰〉는 그루지야가 오세티아의 도발에 말려든 셈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루지야 국방부 차관 바투 쿠텔리아는 그루지야 국기와 나토 깃발이 함께 걸려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그루지야는 러시아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誤判)에서 남오세티아의 수도 조지발라를 점령하기로 결심했다고 시인했다.

어쨌든 간에 사카슈빌리는 남오세티아 공격을 실행했고,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옛 식민지에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키고 서방을 조롱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루지야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지진

큰 지진 뒤의 새로운 진동이 단지 여진일 뿐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진의 전조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9·11 공격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진들은 전 세계에 여진을 남

제앙과 희망이 교차했던 카프카스의 역사

석유가 풍부한 카프카스 지역에서는 2백 년 넘게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차르 치하의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뒤 러시아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영국이나 오스만 제국과 경쟁했다. 1944년에 스탈린은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시베리아로 추방했다.

옛 소련이 붕괴하자 19세기의 ‘거대한 게임’이 되살아날 길이 열렸다. 카프카스의 지배권을 놓고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다툰 여지가 생긴 것이다. 1999년에 체첸을 침략한 뒤 러시아는 이 “세계 열강들의 충돌” 와중에서 “우리는 카프카스의 교두보에 있는 우리 진지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20년대는 카프카스에서도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졌지만, 주요 열강이라는 지각 판들이 계속 서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격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의 충돌은 충돌의 당사자 중 하나가 미국의 예속 국가였지만 사실은 제국주의 간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루지야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정말로 두 핵 강대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비굴하게 지지하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져 있고, 경기 침체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격을 실행했고,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옛 식민지에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키고 서방을 조롱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루지야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확실한 것은 그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권력과 이윤을 얻기 위해 각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도 미국 권력의 한계를 시험해야 한다.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체제에 맞선 우리의 저항으로 말이다.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러시아 제국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민족적·종교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919년에 카프카스 북부 지역 주민들이 혁명을 지지하며 봉기했다. 1921년에는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산악 주민들의 자치 공화국’이 수립됐다. 체첸의 역사가 아프토르하노프는 당시를 “다양한 카프카스 민족들 간의 정치적 평화였다. 카프카스의 지배권을 놓고 소비에트 정부의 인기가 최고에 달한 시기”로 묘사했다.

혁명이 고립되자 이런 성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악 주민들의 공화국은 1924년에 해체됐다. 스탈린이 직접 개입해서 북오세티아와 남오세티아의 재통일을 가로막았다. 스탈린의 반혁명으로 소비에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의 지배가 되살아났고 카프카스에서 레닌의 유산은 파괴됐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지지해야 할까

최미진

경찰이 전국적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에 ‘스텔스’ 등 전담 기동부대까지 만들어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앞세워 ‘민생치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들의 말에서 구린내가 풀풀 난다. 경찰은 가끔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획 단속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과 은밀히 유착돼 있어 성매매가 온존하는 데 한몫해 왔다.

이번에도 경찰이 성매매 업주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안동 마사지업소 업주들이 보유한 ‘경찰 상납 장부’에는 수백만 원씩 상납받은 경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성상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동대문 경찰들만이 아니다. 이 사회 지배층 상당수가 성매매에 연루돼 있거나 성매매를 비호하고 있다.

경찰청장 어청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호텔은 3분의 2가 룸살롱이고 여기서는 성매매도 이뤄진다는 것이 폭로됐다. 이명박이 소유한 건물에도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이 있었다.(그래서인지, 이명박은 성매매 단속을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마사지 걸은]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서비스가 좋다”는 발언으로 성매매에 대한 저열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자들이 성매매 단속을 말하는 것만큼 위선적인 것은 없다.

더구나 단속·처벌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렵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집창촌 규모가 줄어 통계상으로는 전체 성매매도 줄어들었지만, 마사지업소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는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이 지적됐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경찰의 단속 횟수로 추정한 것일 뿐이고, 사실상 성매매나 다름없는 유사 성행위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단속을 피해 해외로 성매매 하러 나가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된 이명박 소유 건물의 유흥주점
— 사회 지배층들은 성매매가 온존하는 데 한몫해 왔다

이 지났어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성들이 성을 팔아야 하는 원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만큼 임금도 적고 상시적으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이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 절망의 끝자락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 미아리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전 중앙경찰서장 김강자조차 당시 1천 명의 성매매 여성들 중 1백2명만이 집창촌을 떠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여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매매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물론, 그는 ‘제한적 공창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단속인력 확충을 대안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제 위기의 그늘이 점점 짙게 드리우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9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 때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매매가 급증했다.

지금의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성매매 여성들을 속죄양 삼는다. 이것은 처벌을 두려워 한 여성들을 포주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규정해 탈성매매를 돕겠다고 했지만, 강요나 인신매매 등에 의한 성매매처럼 특수한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돼 가난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속죄양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4년~2007년 검찰·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성판매자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37.6퍼센트의 여성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실형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성매매 알선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형을 받았고, 벌금형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여성들의 빚을 늘려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구실을 했다.

기소유예된 여성들도 성매매 기록이

남고 어떠한 지원도 없어 다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적 올리기 급급한 경찰들이 구조요청한 성매매 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여성은 전체의 5.2퍼센트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에게 지급되는 자활지원금은 한 달에 42만 원에 불과했다.

성매매 여성 단속·처벌 강화는 성매매를 근절하지는 못하면서 경찰력 강화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이번 단속은 촛불시위 이후 경찰의 ‘불법 엄단’ 선포,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기간 선포, 공안기관 확대 등 전반적 경찰력 강화와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집중단속은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만을 부각시키며 경찰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이런 문제들을 초래한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가리는 효과를 낸다. 강화된 경찰력은 주로 정부의 정책에 도전하는 민중운동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성매매 단속에 투입된 경찰기동대의 원래 업무는 시위 진압과 조계사 수배자 검거 등이다.

따라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물론 성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사회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존재할 수 없다.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차별적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다. 따라서 성매매 업주들이 성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처벌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지지를 보낼 수 없다. 여성들을 감금·폭행·갈취하는 포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러나 성매매 단속·처벌 강화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성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성을 왜곡시키고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논리와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이등시민 취급받는 뿌리 깊은 여성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뿌리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을 촉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서울 중구 의원들의 역겨운 성매매 잔치



성매매 의원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구 시민들

중구 의회에서는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5~6월 의원 3분의 2가 술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그 의원 6명 중 5명은 한나라당 의원이다. 1백명이나 되는 중구 주민들은 진상 규명과 관련 의원들의 사퇴를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성매매 비용을 제공한 의원의 진술서와 카드 영수증, 해당 의원들의 음성파일까지 있는데도, 관련 의원들은 여당의 하수인이 된 경찰의 영성한 수사

하에 사건을 덮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성매매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으나 정작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런 사실을 알리려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펼침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왜곡하고, 구청과 경찰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는 지난 1백 일 넘게 촛불시

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했던 이명박 정부와 신기할 만큼 닮아 있다.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은 “5~6월이면 시민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에 반대하며 한창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다. 구민들을 걱정하는 구의원이라면 거리에 나와 시민들과 촛불을 들었어야 함에도 중구 구의원들은 성매매에 향응 접대나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발언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미진

중구 의회 성매매 의혹 관련 의원들
사퇴 촉구를 위한 중구시민 모임
<http://cafe.daum.net/junggu.action>

신자유주의의 파산과 일본 정치의 위기

한규한

‘만화 오타쿠’ 아소 다로가 일본의 새 총리가 됐다. 아소 다로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했다”는 망언으로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인 징용으로 악명 높은 아소탄광의 사장이었다. 이 탄광에서 조선인 5천 명이 가혹한 중노동으로 죽었다. 아소 다로는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한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소 다로는 자민당 내에서 소수파 파벌 출신이다. 그는 자민당의 심각한 위기를 배경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자민당은 11월 정권의 운명을 가를 총선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후쿠다를 내칠 수밖에 없었다.

고이즈미-아베-후쿠다를 배출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마치무라파는 사분오열한 상태다. 자민당 정권의 지지율 폭락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을 동요시켰다. 공명당이 이탈하면 자민당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 공명당은 선심성 정책이라 할 만한 ‘정액 감세안’을 자민당에게 관철시켰다. 정액 감세는 대체로 서민에게 유리한 것인데, 그동안 자민당이 내세운 ‘재정 건전화’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실, 전 총리 후쿠다의 사임은 고이즈미 이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노선’의 최종 파산이라 할 만하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자민당을 위기에 빠트린 것이다.

유동성

고이즈미-아베-후쿠다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노선의 주된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였다. 자민당 정권은 매년 2천억 엔에 이르는 복지예산 삭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일본의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툰 정도다. 61퍼센트의 가구가 평균 소득 이하를 벌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1997년 한 가구당 평균소득이 6백57만 엔이었지만 2006년 5백66만 엔으로 줄었다.

이런 ‘구조 개혁’ 노선은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다. 일본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살짝 회복하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하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 2/4분기

‘제국주의 오타쿠’ 아소 다로가 집권당을 구할까?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 ‘회복기’ 동안에도 소득 격차는 극심해졌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이 확산됐다.

아소 다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정 건전화’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내세웠다. ‘노인 이직제 정책’으로 원성의 대상이던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소 다로의 앞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당장 총선에서 자민당이 안정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소 다로는 역대 최단명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 총선 결과는 자민당이 안정 의석 확보에 실패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이후 일본 주류 정치의 유동성을 더 증폭시킬 것이다.

설사,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아소 다로가 총리직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류 정치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공격, 친재벌 정책,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해외파병 정책 등 자민당 정권을 위기에 빠트린 근본적 모순들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가올 경제 위기가 아소 다로를 강타할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1백80퍼센트에 달하는데, 아소 다로식 경기 부양 정책은 이를 더욱 늘릴 것이다.

한편, 아소 다로의 총리 취임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가 결합한 상황에서 극우 정치인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아소 다로는 ‘군국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이다 만신창이가 된 아베의 코미디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와 미국 패권의 쇠퇴가 맞물린 상황은 일부 일본 지배자들로 하여금 일본의 독자적 ‘군국주의화’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부추길 것이다.

평화헌법

이런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일본 민중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진보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세계 제2위 국가의 제2당인 민주당 역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길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한다.

물론 현재 일본 노동계급은 여전히 사기가 높지 않다. 산업투쟁 건수는 장기불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

일본의 주류 좌파는 그들 자신의 우경화와 1996년 선거법 개악으로 주변화한 이후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일본 공산당은 당세를 확장 중이다. 신입 당원의 상당수가 20대다. 일본 공산당은 최근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고, 사민당은 신자유주의 반대와 일본 ‘군국주의화’ 반대를 더 분명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개혁주의 전략을 수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네트워크인 ‘9조의 회’(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의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미)에 가입한 단체들이 1만 개를 돌파했다.

일본 진보진영이 개방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다면 일본 군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은 훨씬 강해질 것이다.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확대합시다

촛불 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신청한 사람이 1백 명을 넘었습니다.

이분들 중 다수가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저항의 촛불〉을 접하고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직장인, 주부, 노동조합원,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했고, 몇몇 분들은 〈저항의 촛불〉에 대한 지지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부 정기구독자

“시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시원스레 표명이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실에 기반한 논조와 객관적인 기사들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정기구독자

“다함께! 신문이 노동자의 입장과 이명박에 대한 반감을 대변하는 것 같아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농협노조 조합원 정기구독자

한 공무원노동자는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지금 30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항의 촛불〉 구독은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토론과 행동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 건설을 바란다면, 주변에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을 권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런 네트워크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독을 위해 다함께 회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독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토론과 행동을 하고, 구독 기간이 끝난 독자들에게는 제때에 구독 연장을 권해야 합니다.

김지태

주간
〈저항의 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_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_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예금주 백은진)
048402-04-014849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우리가 흠어져 있는 개인이라면 저항할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대중 행동에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뚜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김용욱

1945~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간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다. 특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전쟁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높았고 각종 복지 정책이 도입된 유럽에서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쓸데없고, 자본주의 틀 내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다는 개혁주의 이상이 실현되는 듯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짧은 파업으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따낼 수 있었고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에 따라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윤율이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자본가들은 작업 속도 가속화, 임금 인상 억제 등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려 했고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양보를 따내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졌다.

그래서 때때로 노동자들의 불만은 개별 작업장 수준을 넘어 폭발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들이 1968년 폭발한 학생 투쟁을 지지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파시스트 독재에 항거하는 운동에 노동계급이 참가했다. 영국에서는 1972년 광부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2년 뒤 보수당 정부가 실각하고 노동당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운동의 방향

1973년 석유 파동이 방아쇠가 돼 불황이 본격화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투쟁을 전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상당한 양보를 얻어 냈고 불황의 파파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노동자 투쟁이 군사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던 포르투갈에서 노동자들은 경기 후퇴가 가장 심각했던 1973년~75년에 대대적 임금 인상을 따냈다. 그래서 임금 소득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 52퍼센트에서 1975년 69퍼센트로 경증 뛰었다. 비슷한 시기 파시스트 독재를 무너뜨린 스페인에서도 복지 제도 확충과 부유세 확대를 약속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 투쟁이 주류 정치 체제를 뒤흔들면서 주력 입대료가 대폭 인하되고 낙태와 이혼이 합법화됐다. 이런 투쟁들은 불황의 시기에도 기층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발휘해 단호히 싸우면 얼마든지 양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아쉽게도 궁극적으로 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사민당(사회당) 등 개혁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케인스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이 잠시 양보하면 자본가들이 투자를 늘려 호황이 곧 재개될 거라고 철칙 같이 믿었다.

그러나 1973년 시작된 불황은 계속됐다. 1974~1976년에는 심각한 경기후퇴가 찾아왔고 1976~1979년 사이 일부 제

3세계 국가의 고도성장 덕분에 경기가 조금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1980년 이후 미국의 이자율 급등과 제3세계 외채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경기 후퇴가 찾아왔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나중에 신자유주의로 불리게 될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81년 당선된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처음에는 각종 케인스주의 정책을 도입했지만 민간 자본가 투자 활동이 재개되지 않고 수입만 늘어 국제사회 지위가 확대되자 이내 급진적 건축 정책을 취했고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당시 기층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지배자들에게 묻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일관되게 방어하기 위한 명확한 정치적 방향이었다. 당연히 지배자들과 타협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층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투적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

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각 나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은 이런 과업을 방기했다. 예컨대 이탈리아와 스페인 공산당은 1970년대 말 주류 자본가 정당과의 타협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구조조정을 받게 될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시스트와 우익의 반동을 막기 위한 ‘헤게모니 블록’을 결성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정책을 정당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긴축 정책으로 경제 위기의 파국적 효과가 심각해지면서 극우파의 영향력이 커졌을 뿐이다.

일부 혁명적 좌파들은 개혁주의 지도부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층 노동자 운동을 건설하려 했다. 이탈리아에서 여러 변혁 조직들과 영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시도가 대표적이었다. 이탈리아 변혁적 사회주의 조직들은 한 때 수십만 명의 전후적인 현장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참을성 있게 공산당 지지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포기했고 영향력 확대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는 테러 행동에 나섰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기층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조직하는 공동전선 운동인 ‘현장 조합원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추세를 역전시키기에 SWP의 규모가 너무 작았다.

당시 운동이 개혁주의 지도부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전투성은 조금씩 잠식됐고,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자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노동자들은 전후 호황의 성과들 중 많은 것들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노동자 투쟁이 거둔 성과가 보여 줬듯이 패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어떤 정치가 운동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였다.

여러분의 기고와 편지를 환영합니다.
생생한 경험, 자신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지난 호 ‘파시즘’ 기사를 읽고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장악과 공안탄압 등 끔찍하고 억압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를 연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항의 촛불>5호의 ‘파시즘’ 관련 기사는 이명박을 파시즘 정권이라고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파시즘의 개념을 매우 느슨하게 사용해 단순히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우익 정권을 파시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보지 않는 것은 진짜 파시즘의 등장을 간과하게 만드는 악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서

또 장호중 기자는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파시즘에 맞선 진보·개혁 연합론과 맞닿아 있다며 그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파시즘’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나 사람들이 파시즘에 맞선 진보·개혁 연합론과 맞닿아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예를 들어 이명박을 ‘양복 입은 파시즘’정권이라고 여기하는 ‘노동자의 힘’이 진보·개혁 연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편, 파시즘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반(半)권위주의 반(半)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이 나라에서 국가 기구로부터 독립한 반동적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 파시즘의 토대는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파시즘의 형태를 취하기보다 국가 기구 자체가 반동화할(예컨대, 군부 쿠데타 등) 가능성이 더 크다.

더구나 우리 운동이 아직 결정적 패배를 당하지 않았고, 반이명박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파시즘의 위험을 부각시키는 것은 운동의 사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은영

국가보안법 60년이면 충분하다

1948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행위특별 조치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은 곧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당시 모호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실에서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했고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국가보안법은 좋고 탄압이다”하는 말로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12월 1일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괴력을 발휘해 1949년 한 해에만 11만 명이 체포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후원한 이승만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그해 12월에 UN은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고 그해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회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0년째인 올해, 9월 27일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의 날 집회 때도 국가보안법에 맞서 투쟁하자.

김덕엽

기고

letter@resistcandle.com

9월 29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지면 관계상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제6호

부시와 이명박이 가리고 싶은 이라크의 진실

KBS에서 9월 10일 방영한 <수요기획 : 전쟁의 저편 — 미군들의 이라크>는 최근 이라크가 안정됐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이 프로그램은 김영미 본청지역 전문 PD가 올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이라크에 ‘불법 잠입’해 찍은 것이다. 그녀는 정부 허락 없이 체류 및 방문 금지 국가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귀국 직후 형사고발됐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됐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서 특히 보도 통제를 강화해 왔다. 현재 이라크에서 안전하게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미 PD가 택한 임베드 프로그램(미군의 보도 검열을 받는 종군기자 프로그램)밖에 없다. 김영미 PD는 이런 상황에서도 왜 이라크에 가려 했을까? 그 답은 2004년 한 언론사와 인터뷰 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선 저항군을 마치 테러범으로 몰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테러범이라면 전 국민이 테러범인 것이다. ... 미국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정령이 낳은 비극

김영미 PD가 동행한 미군들은 기지 옆에 있는 민가가 가더라도 중무장을 해야 한다. 언제 자살폭탄조끼를 입고 돌진하는 이라크 인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정령과 정령이 부른 종파 갈등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자살폭탄 공격에 가담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미군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미군들은 하나같이 어리다. 20~25살 된 그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이민 2세거나 흑인에 아이가 한 둘은 있는 가정이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거나, 양육비를 벌려고, 모병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 이라크로 왔으며 하나같이 “이곳에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고 말한다.

<수요기획> 후반부에는 미군이 문통치가든 007 가방을 이 지역 수니파 부족장에게 건네주는, 실소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 나온

‘방화 테러’를 당한 미군 캠프 — 이것이 이라크의 진실이다

다.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종파 간 갈등을 부추겨 온 미군이 부역 조건으로 수니파 민병대에 한화 1천1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사전 승인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임베드 프로그램의 한계 때문인지, 미군과 이라크인들의 고통이 점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김영미 PD는 앞으로 이라크를 10년 동안 취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김영미 PD가 미군의 보도 통제나 정부의 탄압 없이 자유로운 시선으로 이라크를 담아 오길 바란다.

김덕엽

원금 손실과 수수료에 두 번 우는 서민들

내 지인 한 분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중국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천8백만 원 손실이 생겼다. 남은 1천2백만 원이라도 찾고 싶는데, 이 돈을 회수하려면 수수료 2백2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고민이 많다고 한다.

또 한 분은 3년 전에 주거래 은행에 적립식 펀드 구좌를 가입했는데,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원금 회수는 제쳐두고 손실 후 남은 투자금액을 찾고 싶어도 당장 팔리지 않으니 걱정이고, 수수료 또한 고민이다.

지난 8월 금감원과 은행·증권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업

계는 펀드를 팔아 수수료로 1조2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또한 펀드 판매사들은 2005년부터 최근 3년 동안 4조 원의 수수료 이익을 냈다.

업계는 ‘대박’, 서민은 ‘썩박’

펀드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가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썩짓돈 주머니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횡포인 것이다. 지난 5월 금융 당국이 주도했던 펀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시장에 팔기는 것으로 없었던 일이 되었다.

주변을 보면 평범한 서민들이 가정 경제

에 보탬이 되고자 수입을 쪼개 펀드에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투자 원금 날리고, 펀드상품 개발과 판매에 혈안이 된 거대 은행의 알뜰한 영업전술에 펀드상품 수수료가 부담하고, 결국 고통 받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뿐인 것이다.

정부는 금융업계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규제해야 한다. 또 수수료를 인하하고 판매보수제 폐지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경기침체 상황에 두 번 가슴을 치며 우는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것일 것이다.

홍기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조해야 했는가?

며칠 전 서울 광진구에서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선거 평가를 하는 자리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한 활동가는 “공정택 후보가 당선한 것이 이명박을 정치적으로 살려 준 계기가 돼 버렸다. 공안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선거에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민주당과 공조를 했다면 반드시 이겼을 것이고 지금의 공격도 없었을 것이

다” 하고 말했다.

당시 주경복 후보가 고작 1.78퍼센트 차이로 낙선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를 함께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겼을 것’이라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당시 민주당은 높은 반이명박 정서 가운데에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만큼 인기가 없었고, ‘경제 강화’ 교육을 주도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주경복 후

보의 ‘진보후보’ 정체성에 상처만 주었을 것이다. 오히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왔을 수도 있다.

분명한 색깔

혹시나 선거에서 표를 좀더 모으는 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의 공조는 필연적으로 ‘촛불후보’인 주경복 후보의 정책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

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진보후보가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38퍼센트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촛불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의 공조가 아니라, 선거 막바지에 전교조에 대한 악선동을 서슴지 않았던 공정택에 맞서 더 분명한게 전교조를 방어하고 뉴라이트를 공격했다면 오히려 더 많이 득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정택 후보의 당선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을 읽고

지난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은 기존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적 매체들조차 간과하는 점들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유용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점에선 의문이 듭니다.

우선, 정 교수는 이번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국가주의로 결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신자유주의의 각종 위기 국면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니다. 1980년대 말 미국 저축대부조합이나 지난 90년대 말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처리 과정에서 그러했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리먼브러더스와 AIG에 대한 대응이 방임과 구제라는 차이로 나타나는 것도 그 한 예외지 않을까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 대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같이 할 수 있게 미국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을 봐도 정말로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언?

두 번째로 정 교수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금융세계화 측면’이라는 다소 좁은 틀에 바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설명할 때는 ‘부의 양극화, 노동의 자본으로의 가치 이전, 반노동 공세’라는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하기는커녕 더욱 반노동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본가 정부들과 금융·산업 자본들이 금융 세계화의 과실을 하루 아침에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위기 국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같은 조치를 밀어붙이려하는 것이나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려 했던 점 등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국가주의로의 결정적 선회’로 가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럽게 반복하며 모순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가이(정기구독자)

류민희



서평 — 《춘놈들의 제국주의》(우석훈, 개마고원)

통쾌한 고발, 빛나간 분석

한수영

어느 덧 세계경제 10위 반열에 오른 한국 — 불과 60여 년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 이 미국의 제국주의 점령을 도우러 아프간 · 이라크 · 레바논 등으로 진출한 지난 6년 동안 점령 지원군의 수장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었을 뿐 점령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자 쓰여진 책 한권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몇 달째 올라있는 사실은 한국 반전 운동이 역사는 짧지만 비옥한 토양을 축적해 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석훈의 《춘놈들의 제국주의》 전반부는 전쟁터로 뛰어드는 젊은 야수에 대한 관찰은 고발장이다.

보통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했다고 하지만, 우석훈은 파병의 이유로 한국의 독자적 이익을 강조해 진실에 접근하려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경쟁의 위험에 대해서도 글쓰기는 경고한다. 저자는 “이미 한 · 중 · 일 세 나라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유전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과 국제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분석상의 타당한 측면이 있음에도 이 책은 뒤로 읽어내려 갈수록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다.

첫째, 지은이는 한국에서 박정희 시절 “수출주도형 전략”을 채택하면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가 발현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전쟁산업”(저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건설산업)의 북방 진출이 부추겨지면서 “제국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밟았다고 설명한다.

한국 지배자들의 “패권주의”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부터 비롯한다는 설명은 일리가 있다. 세계 최대 수출 대국인 독일은 더 많은 상품을 세계시장에 팔아치우려는 동기에서 독일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도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진다는 단서를 달아야 할 듯하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제국주의 대리전



지난 3월 16일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한 한국의 반전시위대

을 치른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출발부터 몰락까지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축적 방식을 유지했다. 이 점은 제국주의의 핵심 동력이 “다수 자본”들의 경쟁이라는 점과 구소련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서 서방자본들과 경쟁했다는 점을 이해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 제국주의는 일국의 특정 정책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질서에서 서로 높은 고지를 차지하려는 자본들 간의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이 결합되면서 발전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본성이 낳는 결과다.

잘못된 대안

저자는 특히 “전쟁산업”인 한국의 건설산업이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제국주의화를 직접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이런 분석에서 출발해 저자는 “평화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글 어디에도 “평화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평화에 기대어 ... 경제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과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자본을 전쟁/평화 자본으로 나눌 수는 없다. 미국 자본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다. 국내의 다양한 자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경련도 파병을 지지했다.

둘째, 저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 · 중 · 일 경제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유럽이 최근 20년 동안 “경제통합을 추진”해 “완전평화”를 이뤘으니, 우리도 이를 본받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유럽에 대한 환상인 동시에 제국주의를 일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유럽의 “역내 군사적 긴장”이 줄어든 기간 동안 유럽 ‘역외’ 지역에서 핏방울이 마른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가? 저자는 유럽연합이 “완전평화”를 이뤘다고 하는 그 20년 동안에 프랑스가 1994년 르완다 학살에 개입했고 2004년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파병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유럽 12개국은 20만 명이 죽은 1990~91년 걸프전에도 돈줄을 대고 병력을 보내 손에 피를 묻혔다. 1999년에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세르비아를 폭격했고, 지금 NATO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저자의 바람대로 하여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또 하

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세력관계의 변화일 뿐이지 자본주의의 생애적 특징인 제국주의 체제의 약화는 아닐 것이다. 그리된다 한들 동북아의 “역내 군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될지 몰라도 유럽 ·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의 분석이 틀릴 뿐 아니라 위험한 까닭이다.

레닌은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평화적 동맹은 전쟁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며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끝없이 경쟁하는 자본주의 위계질서가 존속하는 한 평화는 기껏해야 일시적일 뿐이다.

셋째, 한국 대중 다수가 한국의 소제국주의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석훈은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라크] 파병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그러나 파병은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이 지지기반의 이탈을 감수하고 감행한 것이었다. 파병은 노무현의 아킬레스건으로서 퇴임할 때까지 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노무현 퇴진” 구호는 김선일 씨 피살 후 벌어진 1만 5천명 규모의 파병 저지 집회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출국하는 자이툰 부대를 몰래 빼돌려 ‘도둑파병’한 까닭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 2006년 12월엔 철군여론이 무려 90퍼센트가 됐다.

이런 분석들 때문에 저자는 대중의 능동적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는 듯하다. 전쟁을 막으려면 제국주의에 맞서는 거대한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이 필수적이다. “제2의 수퍼파워”로 불린 국제 반전운동은 미국 제국주의를 중동에서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일부 파병 동맹국 정부들이 실각하는 데서 파병 반대 정서가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우리가 전쟁의 뿌리를 도려내는 과업을 완수하려면 전쟁을 잉태하는 자본주의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이 위험한 야수 집단을 상대할 때 올바른 분석과 대안이 없으면 당하기 쉽다. 이 책을 읽고 미래의 전쟁 위협에 공감을 느낀 독자들이 저자의 대안까지 공감할 필요는 없는 이유다.

영화평 — 켄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

자유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체제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앤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업소개소를 차린다. 앤지는 곧 직업소개소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망적 처지의 이주

노동자들을 야비하게 이용하는 신세가 된다.

《자유로운 세계》는 용기 있는 기업가들이 자수성가하는 진부한 얘기가 아니다. 당차고 자상한 젊은 여성이었던 주인공이 생존과

경쟁 때문에 어떻게 악덕 사장이 되는지를 꼼꼼히 추적한다.

이 영화는 사악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고, 체제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지 보여 준다. 다시 한

번 켄 로치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선사했다.

《자유로운 세계》는 ‘아트선재아트홀’에서 9월 25일부터 상영한다.

http://blog.naver.com/freeworld_08





서울지하철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9월 2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20퍼센트 감원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과 분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지하철 현장을 방문한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현장 점검 인원이 축소되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지하철 역사 무인화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고, 안전인력 축소, 1인 승무제 도입은 대우지하철 참사 같은 비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파업

진짜 철밥통이자 귀족인 이명박 정부와 조종동은 ‘귀족 노조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잇속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서울메트로야말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그래서

운수노조, 서울지하철, 공공기업연영화			히트	신고
네티즌 댓글 146개				
분홍면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00:02	IP 124.45.***.113	
대세기	찬성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08:09:22	IP 124.60.***.59	
노블레스오블레스	당장 이동이 문제가 되겠지만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더 큰 재난을 막으려면 참아야죠.	08:09:22	IP 59.11.***.96	
주른별11	헉나..... 살다 살다 지하철 파업하는 게 정당하게 보이는건 처음인 것 같다.	08:09:22	IP 24.170.***.217	
매드플라	적극 지지....합내세요....	08:09:22	IP 211.181.***.43	
웅달샘	서울 지하철 노조 여러분 백세게 응원합니다.환팅!!	08:09:22	IP 123.212.***.95	
별매	열심히 하세요. 응원 많이 할게요. 파이팅	08:09:22	IP 211.205.***.187	
우직살포	설치류 한마리가 아주 다 잘아 먹는구나....임기전에 나라까지 잘아먹을까 심히 걱정된 다..정말..	08:09:22	IP 124.63.***.157	

아고라 등에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지금 아고라와 지하철노조 웹사이트에는 예전과 달리 시민들의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는 분사화는 분할 민영화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이명박의 민영화 추진에 맞선 최초의 파업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성과없이 파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하며 파업 돌입 이후 거점 농성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파업 대열의 결속력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민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또, 여론의 초점을 형성하며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신생 악법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르

면 열차 운행은 출퇴근 시간에는 1백퍼센트, 평시에는 65.7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시는 과감한 파업 전술이 필요하다.

파업이 시작되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특히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 발전, 철도, 지하철, 공항 공투본(기간산업 공투본)’은 파업을 지지하는 위력적인 대규모 연대 집회를 조직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이명박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강철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행동’

IMF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의 고향을 쥐어짜며 건너온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8백9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코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기륭, KTX·새마을호 노동자들이 3년을 싸우고 있다.

올해 의미 있는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학내외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감동적인 승리를 이뤘고,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

인 성원개발분회도 원·하청연대의 모범 속에 승리를 움켜쥐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는 투쟁 2백50일 만에 해고자 전원복직을 따냈다.

지난 3개월의 촛불 항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줬고, 시민들에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촛불과 비정규직의 만남은 기륭 투쟁을 넘어 계속 확대되고 있다. 60여 시민·노동·사회 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구성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행동, 만인행동’을 조직했다.

아고라에서는 만인행동에 함께 참가하자는 글이 베스트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1만 명의 선언과 후원금이 모였고, 23일 시국선언과 결의대회, 그리고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경제 위기 속에 이명박 정부는 더욱더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계속 함께 투쟁해야 한다.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행동을 강력하고 거대하게 조직해야 하고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이명박 정부에 어퍼컷을 날리는 촛불 2기의 신호탄으로 만들자.

조명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강남성모병원은 2002년에 정규직이 담당하던 간호보조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2006년 10월에는 이들을 파견 노동자로 전환했다. 급기야 만 2년이 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간호 파견 노동자 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화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못된 법을 만든 사람들은 평생 일 안 해도 먹고살 사람들이지만 그 법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들은 해고되면 당장 아기 분유값, 자식들 학비 등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환자와 간호사들에게는 귀중한 존재들이다.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기구를 관리하고 물품을 준비하는 일, 침대 시트를 갈고 수술 기구를 소독하고 중환자들의 손발 구실을 하는 일 등.

“저희들은 수술방, 중환자실 등에서 열심히 간호사들을 돕고 환자들을 도왔어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농성장 지지 방문을 오고 있다. 환자들은 용역강패가 여성 조합원을 때리려 하자 “그만두지 못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돈 잘 버는 병원 ‘빅5’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강남성모병원은 내년 5월 1천2백 병상이 있는 대형 건물을 개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고 저항을 시작하자 사측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농성장에 용역강패를 세 번이나 투입했다. 용역강패 수십 명이 여성 조합원의 팔을 비틀며 농성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가톨릭이 이럴 수 있냐”고 절규했다.

2002년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병원 측은 경찰이 병원 내의 성당까지 진입하는 것을 허락했다. 전투경찰은 성당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던 조합원들까지 폭력연행했다.

최근에도 병원측은 정규직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직원식당을 외주화했고 식당에서 일한 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한 자리로 발령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의 정규직 노조는 병원측이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김여진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지난 1기 발전위 안보다 ‘덜 나쁜’ 안이고 ‘더 내고 덜 받는’ 양을 상당히 줄인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촛불 항쟁이 이명박의 기를 꺾어 놓은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1백 원 흠쳐

갈 것을 10원씩 열 번에 나눠 흠쳐간다 해도 그것은 도둑질이다. 문제는 이번 개악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국민연금으로 번질 ‘개악의 악순환’도 문제다. 이미 개악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핑계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듯, 공무원도 ‘고통분담’했으니 국민들도 좀더 ‘고통분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가운데 전교조, 민공노 등의 지도부가 발전위 안에 합의해 준 것은 큰 잘못이다.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지키는 구실을 해야 할 노동조합이 “제 살 깎기”를 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에 반

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발전위 최종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일부가 개악안 통과를 저지하기보다 새로운 타협안 구상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공무원과 교사 활동가들은 이런 타협주의적 경향을 단호히 비판하며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박천석(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 안명례 씨 인터뷰

“아들은 대문으로 나오고, 이명박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촛불 운동에 앞장서 온 활동가 7명이 조계사 안 천막에서 수배 생활을 한 지도 벌써 80일이 넘었다. 얼마 전 <한겨레> 1면에는 수배자 김광일 씨(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다함께 운영위원, 오른쪽 사진)의 어머니 안명례 씨가 민가협 집회에서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눈물 흘리는 사진이 실려 수배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보여 줬다. <저항의 촛불> 서범진 기자가 안명례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아드님의 수배 이후 가족들 모두 마음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어요. 웃을 일이 없고, 웃고 싶지도 않아요. 1주일에 한 번 조계사로 얼굴 보러 오는데, 보고 돌아서면 또 한참 걱정이 되서 눈물이 나요. 아들 앞에서는 못 울어도 혼자 있으면 계속 울고 잠도 편히 못 자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갈비뼈가 아픈데도 도저히 아들 생각하면 폭신한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요.

손녀딸이 항상 편하게 자라고 하는데, 마지못해 침대에 갔다가도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자요. 날이 선선해지는데, 선선해져도 걱정이예요. 추울까 봐요.

광일이가 수배 때문에 아버지 환갑잔치에도 못 왔어요. 아버지 몸도 건강하지

않는데, 꼭 형제·가족 다 모이자고 광일 이랑 동생이랑 미리 전화해서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수배가 돼 버려서 올 수가 없었어요. 모인 친척들 모두 다 아들 왜 안 오냐고... 그 때는 일단 급한 일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그게 슬프던지 화장실에서 또 몰래 울었지요.

민가협 집회 때 다른 수배자 가족들도 만났는데, 다들 같은 심정이예요. 너무 걱정이 많고,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힘내자고 하고 그러죠. 민가협 분들이 끝까지 싸우자는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많이 힘이 됐어요.

이명박 정부가 촛불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TV에서

하던데, 혹시라도 좋은 얘기가 할까 해서 밤 늦게까지 끝까지 프로그램을 봤어요. 정말 왜 봤나 소리가 나오고 대실망이었어요. 자기가 잘 했다는 소리만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할 수 있는지... 광일이가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해서 저렇게 된 거면, ‘어휴, 저 놈의 자식!’ 하고 말텐데, 잘못된 게 없으니 정말 항상 걱정하고 뒷바라지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까지 조사하는 걸 보면 정말 저건 초등학교 머리로도 못할 짓이다 싶어요.

아드님과 아드님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촛불들에 한 말씀 해주세요.

광일이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꼭 품어주고 싶어

요. 수배가 풀려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밖으로 마음껏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도와주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일이가 버틸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분들 덕분이에요. 수배 때문에 광일이가 은행에 갈 수 없는데, 은행 직원 분이 한번은 직접 조계사까지 오셔서 은행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 분 말씀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기권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거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아요.

빨리 우리 아들은 큰 대문으로 당당히 나오고 이명박은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대 공동 행동을 계속 확대하자

정충남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균 정책기획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평균 10여 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8월까지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 이후 진보연대와 ‘다함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려 하는 등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이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영장재

청구를 시도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규정 관련 2심 선고 공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고 1심 때보다 오히려 검찰의 구형 형량이 더 늘어났다.

공안탄압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정원법을 고쳐 국정원 업무를 정치단체와 노동운동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검찰도 공안3과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국정원과 공안부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탈북자들이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만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갈수록 공안탄압 강화

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위기감의 반영이다. 따라서 탄압에 맞선 운동을 굳건히 건설해 나가야 한다.

9월 27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사노련방어공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공안탄압 규탄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집회는 그동안 국가탄압의 주된 대상이었던 ‘친북’좌파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좌파들이 함께 조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지 않았던 좌파 단체들이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연대 활동을 더욱 확대하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탄압 확대 규탄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

일시: 9월 27일(토) 오후 3시

장소: 탑골공원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예정)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방어공대위